

‘응징 위주 법 개선’ 본격 논의

조계종 호법분과위 ‘징계제도...’ 세미나

●...종단에서는 수차례 사면·복권을 통하여 징계가 진행중인 승려에 대한 종단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주로 서류상의 관리를 중심으로 징계내역의 기록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공직취임제한 등의 자격제한이 주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징계자의 수행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계자를 일정 기간 특정한 지역과 장소를 한정하여 참회, 교육, 봉사하는 부분적인 자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의 징계제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회형 징계는 제직 등 중징계자 중 참회를 통해 비위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징계자에 대하여 지역과 장소를 지정하여 간경, 기도, 영불 등 일정 행위를 강제하는 과정은 부과하는 것이다. 교육형 징계는 공권징계 징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강연 교육, 안거와 같은 종단에서 지정하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승남이 낮거나 사·승 또는 과실법, 우발적 행위 등에 대하여 종단이 수탁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이나 무연고 노스님에 대한 봉사, 폐사지나 사적지 관리 등을 맡기는 봉사형 징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징계자 관리를 위해서는 징계자 스스로 거주지 및 현재의 수행 현황, 성과, 반성 정도를 종단에 보고하는 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구 호법국의 활성화도 뒤따라야 한다. 종지(조계종 호법부장)

성 정도를 종단에 보고하는 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구 호법국의 활성화도 뒤따라야 한다. 종지(조계종 호법부장)

●...징계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벌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 중벌의 정비가 요구된다. 단기간적으로는 징계 관련 법령의 구체성 확보이다. 구성원들이 이의 없이 승복하고 따를 수 있고, 임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징계 법령의 제정이다. 징계와 관련한 원칙이나 방향, 유형, 해당 사항, 징계의 집행과 관리, 소송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종단의 특성상 일반 사회의 자유형의 징계는 아직 많은 문제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자 스스로가 본인의 거주지 및 수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교구 호법국에 징계자 관리 실무를 담당케 하면 교구 호법국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징계원인 근절...제도 목적 강화”

“교구 호법국 활성화...관찰관제 검토”

대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원(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종교단체는 국가의 형벌 제도와는 다르게 임의성과 신분형 징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고의 징계 수단으로 단체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불교계에서는 ‘멸빈’이나 ‘치탈도첩’을, 가톨릭에서는 ‘과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영구 제명은 원칙적으로 재특도(재입교)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징계 유형으로 공직 취임이나 권리 제한의 수

목어

미국의 폭력과 주권침해

미국은 진정 우리의 우방이며 자신할 수 있는 인권보장 국가인가? 아니면, 한국을 무단 점령한 점령군인가? 매항리 미군 사격으로 유린당한 기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월 10일 공개된 미국의 주둔군지위협정협상(SOFA) 시안은 굴욕적인 주권침해이다. 미주둔군의 범죄행위가 터질 때마다 과연 이 땅이 누구의 땅이며, 자들이 왜 왔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강간, 살인, 폭력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수시로 저질러도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되면 닮은 개골이다. 한국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미군 쪽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SOFA협정이 한국사법권의 상위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자치국가 관할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탈취하는 안하무인적인 행위다. 더구나 미국군의 미결 피의자를 위한 유치수용시설을 미국 유치장 수준으로 별도 신축하는 역지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

대한민국은 미국 땅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치욕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대처 능력조차 없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간건자경(尼乾子經)에 있는 말이다. “왕이란 백성의 부모로서 도리에 의해 사람을 거두어 보호하며 편안케 해주는 까닭에 왕이라 부른다. 왕은 백성을 위주로 하여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민심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나라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왕은 의당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보살피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이 소중히 가꾸어 온 주권국가이다. 국민의 고통과 치욕에는 아랑곳없이 명예나 이익에 끌려 다니며, 과시적 행적이나 실속 없는 외교 정책으로 국가 경영을 한다면 폐쇄되는 것은 국민이요, 망하는 것은 국가일 뿐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적 긍지를 회복하는 소신 있는 정부를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공존을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직접 묻고 싶다.

법신(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징계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대원) 주최로 19일 열리는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유형 징계의 도입,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의 주장이 제기돼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징계제도에 대해서는 징계 유형의 모호함,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관련 법, 응징 위주의 법집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징계는 또다른 분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문제보다 승가 본연의 모습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잃어버린 데서 분란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징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없는 징계제도의 개선 논의는 언제까지나 해답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징계제도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수행’과 ‘연구’의 관계가 이전 어떤 시대보다 더 서먹서먹해진 것이 현대 한국불교의 특성이라면 특성이자 불교사를 훑어보아도 수행과 연구가 제각각으로 갈도는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선교일치를 말하고, 혹은 교관겸수를 주장하던 선례가 없지 않지만, 현대에는 아예 수행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제각기 고유한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난날과 다르다. 전통사회에서는 수행과 연구를 거의 승가에서 도맡아 왔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역할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스님들이 수행과 연구를 동시에 했다고는 볼 수

수행과 연구 둘 아닌 하나인데...

20 선수행론의 정립

없지만 그밖에 제3의 집단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불교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라는 연구자집단이 등장했다. 서구식 학술중도의 확산과 이식에서 비롯된 것이든, 학술의 자기문화화과정인, 아무튼 불교의 수행과 연구를 독점해 왔던 승가로서는 연구자집단의 등장이라는 말만으로도 끝내기 쉬울 뿐 아니라, 자칫 정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집단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간 구석에서 먼지를 털어쓰고 있는 불교라는 이름의 ‘유물’을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햇빛 아래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객관성의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전통은 만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두 집단의 입장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좀처럼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수행자와 연구자 사이는, 권위자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다지 우애가 돈독한 것 같지는 않다. 양 집단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이 이리저리 높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수행과 연구(즉 선과 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태의 거추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과 연구(자)의 긴장은 거짓 긴장이다. 아무리 수행을 ‘배제’ 하면서 연구만 하려고



서정형 서울대 겸사·철학

해도 연구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일부이다. ‘깨침’은 본래 어원학적으로 ‘아는 것’이다. 분별지에 근거해서 무분별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구행위를 배고픈 뱀이 밥을 먹지 않고 종이 밥 얘기만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자유지만 수행에는 이미 연구행위의 결과인 나름의 지식체계가 정제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은 판단을 요구하며 판단을 위해서는 적든 크든 지식이 필요한 법이다. 요컨대 수행과 연구는 본성상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자)과 연구(자)의 긴장은 거짓 긴장이다. 아무리 수행을 ‘배제’ 하면서 연구만 하려고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설교문: 고은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주요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연구 50만원

길월사 영탑(靈搭)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길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길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용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한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용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길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